제27권 제4호 2011년(겨울) 통권 75호, pp. 187-218.

정당재편성 이론으로 분석한 2007 대선*

조 기 숙**

Ⅰ. 머리말
Ⅱ. 정당재편성 이론과 분석모형
Ⅲ. 정당재편성 이론으로 분석한 2007 대선
Ⅳ. 한국의 정당재편성 가설 검증
Ⅴ. 결론과 2012년 선거에 주는 시사점

국문요약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언론과 논평가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실패가 2007년 대선 패배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보수는 경제파탄, 진보는 양극화에 책임을 돌렸다. 양자의 진단이 정반대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실패'라는 프레임에 동의함으로써 기정사실화 되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도는 촛불집회에서 회복되었고 사후 역대 가장 훌륭한 대통령 중 한 명으로 평가받아 이러한 해석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 글은 정당재편성 이론에 기초해 2007년 이명박 후보의 승리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일견 모순되고 혼란스러워 보이는 한국의 정치현실도 정확한 진단과 예측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의 당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는 한나라당의 높은 정당지지도였으며,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가 이명박 후보 승리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주장은 경험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개혁 성과와 복지주의 정책 도입으로 2002년의 선거연합이 해체되었고, 노 대통령의 지지기반은 지역에서 계층으로 변화를 가져왔다. 그 결과 한나라당은 발전주의 이념으로 재연합되었고, 대통합민주신당은 뚜렷한 정체성과 비전을 보여주지 못해 정당해체를 경험한 것이 2007년 대선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주제어: 정당재편성, 2007 대통령선거, 정당해체, 복지주의, 발전주의

* 이 연구는 2011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Ewha Global Top 5 Project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다. 논문의 수정에 도움을 준 익명의 세 분 심사위원께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미국 Indiana University, 정치학 박사.
저서 및 논문 "2008 촛불집회 참여자의 이념적 정향: 친북반미좌파 혹은 반신자유주의?" 『한국정치학회보』, 43집 3호: 125-148 (2009) 외.

Ⅰ. 머리말

2007년 대선 이후 한국 정치는 촛불집회 등을 겪으며 요동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명쾌한 설명은 부족하다. 무엇보다도 의문스러운 것은 지난 10년간 집권했던 진보진영이 2011년 10.26 재보선 이전까지는 왜 2012년 대선에서 대안세력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할 만큼 지리멸렬해졌는가 하는 점이다. 일부 논평가와 언론은 최근 진보진영이 처한 위기의 일차적 책임이 참여정부에 있다고 주장한다. 무능, 독선, 경제실정 등 책임의 이유는 다양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낮은 지지도가 정권교체의 일차적 책임이라는 데 동의한다(최장집·박상훈, 2008; 오연호, 2007; 손호철, 2007; 강원택, 2010; 조국·오연호, 2010; 가상준·노규형, 2010;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의 수많은 기사, 사설, 논평). 보수 측에서는 경제파탄론(경제성장의 부족), 진보 측에서는 양극화 책임론(분배의 부족)이라는 어느 면에서는 서로 상반되는 진단을 하지만, 양쪽 모두 경제무능론을 내세운다는 점에서는 동의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 중 왜 그렇게 낮은 지지도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가? 일부 언론은 퇴임 후 노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변한 이유를 서거에 따른 동정여론 때문이라고 분석한다(신창운·고정애, 2010). 하지만 퇴임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촛불집회 기간 중 내일신문과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가 실시한 전화설문조사에서 노 대통령은 49%에 달하는 지지를 받았고, 또 다른 조사에서도 촛불집회 참여자의 73%가 노 대통령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온다(조기숙, 2009).

노무현 대통령은 2010년 10월 『시사저널』이 30여 개 분야별 전문가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우리 시대의 영웅'과 『한국대학신문』이 대학생 포털사이트 캠퍼스라이프(http://www.campuslife.co.kr/)와 함께 전국 200여 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0 전국 대학생 의식조사'에서도 1위에

선정된 바 있다(노무현재단, 2010). 그의 분신으로 알려진 문재인은 정치인 경력도 없고 정치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선후보 반열에 올랐다. 짧은 시간 안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달라졌다면 어떤 평가가 잘못된 것이고 어떤 평가가 정확한 것일까? 현재의 진보진영의 위기를 참여정부 책임론에서 찾을 수 없다면 진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정치적 사건만을 놓고 본다면 한국의 유권자는 변덕스럽고 믿을 수 없는 존재처럼 보인다.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일관되게 설명하는 이론적 틀과 분석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정치의 변동과 선거 및 정당지지도의 등락을 서구에서 사용되었던 정당재편성 이론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특히 거시적 정치변동이 2007년 대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다. 이러한 이론적 작업은 한국의 현실정치에서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유권자의 태도나 행위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향후 한국 정치변동의 흐름에 대한 전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서구에서 정치변동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 정당재편성 이론을 살펴보고, 이 이론에 기초하여 유권자, 정치인, 쟁점의 결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현실정치를 예측하기 위한 설명모형을 제시한다. Ⅲ장에서는 정당재편성 이론을 사용하여 해방 이후 한국 정당의 생성과 소멸이라는 발전과정을 살펴본다. Ⅳ장에서는 이러한 모형을 사용하여 2007년 대선 결과를 분석하고, 마지막 장에서는 이러한 분석이 향후 한국 정치에 주는 시사점과 미래를 전망해본다.

이 글의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늘날 진보의 분열,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낮은 지지도, 이명박 후보의 당선, 현재 한나라당의 안정된 지지도는 참여정부와 관련은 있지만 참여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역사적인 정당재편성의 결과라는 것이다. 즉 진보정당은 정당해체를 겪은 데 반해 한나라당은 보수정당 재연합을 이뤄낸 정당재편성이 2007년 대선 결과를 해

석하는 데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본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한국 정치가 겉으로는 변화무쌍하고 규칙성 없이 예측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서구의 정치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으며, 따라서 큰 틀에서 현실정치 변화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한국의 정치는 국가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이다. 한국 민주주의는 민주화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아직 공고화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학자들이 대안을 내놓을 때마다 정치인들은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며 외면한다. 그러한 이유로 현실정치를 정확히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은 정치학도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전문가들이 책임을 방기하면 이론이나 경험적 근거에 기초하지 않은 근거 없는 추론이 언론에 유포되면서 어느덧 하나의 정설로 굳어진다. 이렇게 발생한 잘못된 정설은 정치인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현실정치를 이론과 경험적 근거에 기초하여 정확히 해석하고 전망하는 것은 정치학의 발전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Ⅱ. 정당재편성 이론과 분석모형

한국의 선거 분석에 중대선거(critical election)(Burnham, 1974) 개념은 오래 전부터 활용되어 왔다(안병만, 1977). 그러나 키(Key, 1955, 1959)의 정당재편성 이론이 한국의 선거 분석에 적용되기 시작한 건 최근의 일이다(조기숙, 1993, 2000: 232-233; 정진민, 2003; 강명세, 2004; 최준영·조진만, 2005). 정당재편성 이론이란 정당체제를 살아있는 생물처럼 발전하는 존재로 가정하고, 그 발전과정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 이론은 각국의 정당체제가 유기체처럼 연합(alignment), 발전 및 안정, 해체(dealignment), 그리고 재연합(realignment)의 변화과정을 주기적으로 반복한다고 가정한다.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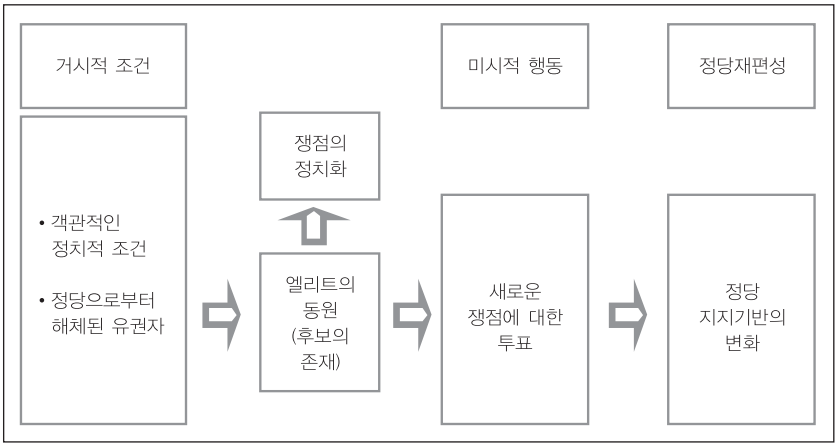
기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이견이 없다(Clubb and Flanigan et al., 1980).

정당재연합을 판단하는 기준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각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구성에 변화가 관찰되었느냐 하는 것이고, 둘째는 정당체계에서 지속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정당이 변했느냐 하는 것이다. 두 조건이 모두 만족되어야 정당재연합으로 규정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학자에 따라서는 우위 정당(dominant party)에 변화가 없어도 정당지지세력의 구성에 변화가 발견되면 정당재연합으로 간주하기도 한다(Sundquist, 1983).

이와 같은 정당연합을 가져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기존의 연합구도를 가로지르는 교차 쟁점(crosscutting issue)이다. 정당재편성을 가져오는 쟁점은 대립쟁점이면서 쉬운 쟁점이며, 이를 균열쟁점이라 부른다(조기숙, 1996). 20세기 초부터 서구 민주주의의 정당들은 자본과 노동에 대한 균열을 기초로 정당재편성이 이루어졌다. 균열쟁점에 의한 정당재편성이 이루어지면, 서로 다른 사회집단이나 조직이 각 정당의 핵심적 지지세력을 구성한다(Lipset and Rokkan, 1967). 미국에서 대공황 이전에는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는 공화당이 다수당이었지만, 시장의 실패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뉴딜(New Deal) 이후에는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변했던 것도 정당재편성의 결과라는 것이다.

일단 정당재편성이 성공하면, 각 정당은 균열쟁점에 대한 차별적 입장을 바탕으로 안정된 연합을 누리게 된다. 이처럼 안정된 연합의 시기에는 정당이 투표 결정의 중요한 변수가 되므로 의회와 행정부를 같은 정당이 지배하는 단점정부가 만들어진다. 그러나 기존의 쟁점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유권자는 새로운 쟁점에 주목하게 된다. 이때 정당이 새로운 쟁점에 대응하지 못하고 유권자와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정당해체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 시기에는 기존 정당에 대한 지지가 하락하고 투표율도 감소하며, 무소속이나 소수 정당이 약진하게 된다. 정당의 해체는 새로운 정당연합을 예견하는 징조가 되지만, 해체가 진행된다고 해서 항상 재연합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림 1〉 정당재편성 모델



출처: Cho(1998).

정당재편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림 1〉에서와 같이 세 가지 조건이 존재해야 한다. 첫째, 새로운 균열쟁점을 부각시키는 거시적인 정치적 조건, 둘째, 기존 정당으로부터 이탈해 새로운 정당연합을 기다리는 다수 유권자의 존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의 양자를 결합시키는 쟁점과 이 쟁점을 통해 정치화를 시도하는 정치엘리트의 존재라는 3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한다(Carmines, 1991; Cho, 2003: 121).

정당재편성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나는 급진적 재편성(critical realignment)으로서 중대선거를 통해 새로운 다수 정당이 출연하는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점진적 재편성(secular realignment)으로, 1964년 미국 공화당 후보였던 배리 골드워터(Barry Goldwater)가 인종문제를 선거 쟁점화한 이후 남부의 백인이 뉴딜연합에서 이탈하여 점차 공화당으로 이동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다수당의 변화는 없었지만, 세대교체를 통해 정당의 지지기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했다.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2008)은 미국에서 신보수주의의 등장이 인종쟁점에 의해 가능했고, 이것이 의회에서 공

화당이 새로운 다수당이 되는 데 기여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이미 정치학자에 의해 오래 전에 제기된 바 있다(Carmines and Stimson, 1989).

유권자의 미시적 투표행위가 거시적으로 정당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때 정당재편성이 완성된다. 정당재편성을 가져오는 데 기여하는 유권자의 투표행위는 크게 세 가지로(Erikson and Tedin, 1981), ① 전환(conversion), ② 동원(mobilization), ③ 세대교체(population replacement)가 그것이다. 먼저 대공황 이후 루즈벨트(Franklin Roosevelt)와 민주당의 압승은 전환에 의해 가능했다고 한다(Erikson and Tedin, 1981, 1986). 이러한 전환은 대공황 또는 전쟁과 같은 충격적인 정치적 사건이 존재할 때에만 일어난다. 두 번째 유형은 상습적 기권자, 무관심층을 동원하는 것이다. 기존 정당으로부터 해체되어 투표를 하지 않던 유권자들이 새로운 쟁점이 떠오르면서 유입되는 것이다(Campbell, 1985). 세 번째 유형은 인구의 자연 증감에 의한 세대교체를 의미한다.

급진적 정당재편성은 위의 세 가지 유권자 변화를 동반하지만, 그중에서도 전환의 비중이 가장 클 때 일어난다. 반면 점진적 재편성은 세대교체에 의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매 30년마다 정당재편성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있다(Beck, 1979). 적어도 한 세대가 지나야 집합적인 인구구성에 변화가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속적 무관심층, 기권층의 '동원' 없이는 어떤 유형이든 정당재편성이 불가능하다. 정당재편성 기간에는 뚜렷한 차별적 쟁점에 대해 각 정당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동안 정당 간 정책 차이가 없어 소외나 무관심으로 기권하던 유권자들이 다수 동원된다.

Ⅲ. 정당재편성 이론으로 분석한 2007 대선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압도적 표차로 당선되는 데 기여한 요인은 무엇일까? 2007년 대선은 왜 역대 최저 투표율인 63%를 기록했을까? 이에 대해 언론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주장은 회고적 투표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일부 논평가는 참여정부가 양극화를 해결하지 못해 표로 심판된 것이라고 한다(최장집·박상훈, 2008). 경험적 연구자들은 경제에 대한 평가가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가상준·노규형(2010)은 국가 경제상황에 대한 회고적 평가와 개인 재정상황에 대한 고려가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강원택(2010)은 개인 경제문제는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국가경제에 대한 평가가 투표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실제로 5년 전에 비해 경제가 나빠졌다는 부정적 평가는 가정살림의 경우 32.5%인 반면, 국가경제는 51.8%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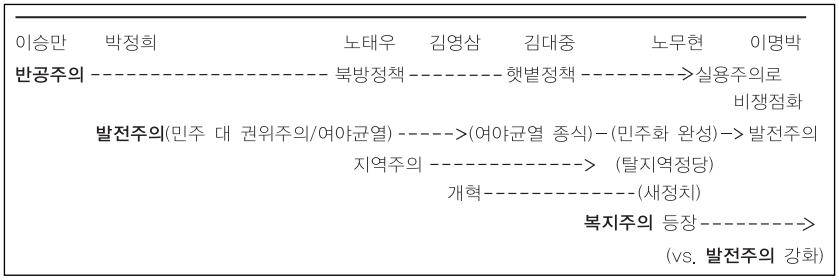
그러나 실제 노무현 대통령 임기 동안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불 이상으로 역사상 가장 높았고, 경제성장이나 안정적 환율관리, 소비자물가 안정에 있어서도 이명박 정부를 능가했다(양정철, 2011). 임기 중 노무현 대통령은 15%의 응답자로부터 경제성장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나, 서거 후에는 58.6%로 높아졌다(신창운·고정애, 2010). 미래발전연구원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여정부에 대해 언론과 당시 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에 무관심하여, 경제가 파탄났다는 비판을 하였습니다. 참여정부가 경제를 파탄냈다는 주장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61.9%의 응답자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경제파탄이 정권교체의 원인이 아니라면 어디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할까.

이 장에서는 회고론적 시각에 대한 반론으로 정당재편성 이론에 기초하여 2007년 대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다. 한국의 정당체제는 서구처럼 완벽한 모습은 아니지만, 정당재편성 이론을 적용할 만큼 유사한 모습을

보이며 발전해왔다. 그러나 한국의 정당 변화에서 중요한 선거가 있기는 했지만, 서구적 의미의 중대선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당 변화가 주로 세대 교체에 의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왔고, 중요한 선거 시기에는 동원이 일어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현재호(2008)는 선거강령에 나타난 정당의 이념적 갈등을 경험적 자료에 근거해 세 시기로 구분한다. ① 해방 후 분단국가의 건설 시기를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 ② 1960년대 이후 민주화 시기까지를 '자본주의적 산업화 분단국가의 형성,' ③ 민주화 이후 현재까지를 '탈냉전 및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시기'로 나누고, 각 시기를 대표하는 지배적 이념을 '반공주의,' '자본주의적 산업화와 발전주의,' '복지주의의 등장'이라고 명명한다. 필자는 이러한 결과에 기초해 해방 이후 각 정당연합을 결정했던 주요 균열쟁점을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그림 2〉 한국의 정당재편성과 균열쟁점



건국 직후 한국에는 수백 개의 정당이 존재했다. 이 가운데 이승만의 자유당은 반공주의에 기초하여 정당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반공주의는 노태우의 북방정책이 등장할 때까지 독재시대를 관통하는 이념이었다. 이것이 현실정치에서 갈등을 일으키게 된 건 김대중의 햇볕정책과 대비되면서부터이다. 북한문제를 둘러싼 남남갈등은 국가의 이념이었던 반공주의가 새로운 대북정책과 부닥치면서 발생했다. 햇볕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그 기반이 매우 광범위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기간에 안보에 대한 위협이 사라지면서, 햇볕정책은 2007년 대선에서 균열쟁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이명박 후보가 선거승리를 위해 북한에 대한 입장에서 실용주의를 내건 것도 대북정책이 균열쟁점이 되지 못한 또 다른 이유였다.[1)]

박정희 시대에는 개발과 독재가 주요 이념이었다. 이 중 쟁점으로 도전받은 것은 민주냐 독재냐 하는 것이었지, 발전주의 모델은 아니었다. 최근까지도 한국 국민의 다수는 발전주의 이외의 다른 대안을 생각해보지 않았다. 박정희 이후 김대중의 집권에 이르기까지 한국 정치를 관통하는 쟁점은 민주냐 독재냐 하는 여야쟁점이었다. 1985년 신민당이 등장한 선거가 여야균열로 정당재편성을 가져오기는 했지만 중대선거라고 칭할 만한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민주 대 반민주의 쟁점이 약화되자, 1988년 총선에서 지역주의 쟁점으로 정당재편성이 일어났다(조기숙, 1993). 이러한 지역적 균열은 3당합당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고 현재까지도 여전히 살아있는 주요 균열이지만, 최근 들어 많이 약화되는 추세이다(최준영·조진만, 2005).

현재호(2008)는 2002년 대선에서 처음으로 선거강령에 복지주의가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2000년 총선에서 지역주의가 약화되면서 이념투표가 처음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으로(조기숙, 2002),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복지정책의 성과인 것이다. 그러나 복지주의가 본격적으로 한국 정치에 등장한 것은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에 의해서였다(현재호, 2008). 민주화 이후에도 발전주의 이념이 지배적이다가 2004년에야 본격적으로 복지주의가 등장하게 된 것은 1997년의 경제위기 그리고 이후 불어 닥친 신자유주의와 그 결과 나타난 빈부격차의 영향 때문이라고 현재호(2008)는 진단한다.

---

1)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대북정책이 다시 균열쟁점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이현우, 2011)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태를 지방선거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이다. Oh and Arrington(2007) 참조.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계급투표를 한다는 가정에 기초해 있어 성립되기 어렵다. 최근까지도 이념에 의한 투표는 발견되었지만, 계층 투표의 증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이현우, 2011). 또한 경제적 양극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금융위기 직후인 1997년 이후인데 왜 하필 2004년에서야 복지주의가 본격적으로 등장했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리고 양극화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저소득층은 계급정치의 경험이 없는 사회에서는 가장 확고한 보수정당의 지지자이다(Burns, 2003). 우리나라에서도 저소득층은 한나라당의 핵심 지지층이다(강원택, 2003; 이현출, 2005). 따라서 2004년 복지주의의 등장이 단순히 양극화의 결과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는 오히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2002년 월드컵으로 레드컴플렉스가 완화되면서 진보적인 정책 제안이 가능해졌고, 결정적으로는 1인2표제 선거제도의 도입으로 민주노동당이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아야 한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은 '새정치 대 낡은정치'라는 선거쟁점에 의해 당선되었다(이현우, 2006). 이 쟁점은 김영삼으로부터 시작된 개혁쟁점이 이어진 것이지만, 정당재편성의 근간을 이루는 균열쟁점은 아니었다. 단지 정치적 진보(개혁)세력의 연합을 가능케 함으로써 선거에서 승리를 안겨준 선거쟁점이었을 뿐이다. 2002년 노무현 후보는 정치적 진보의 연대로 선거에서 승리했다. 만일 당시 노무현 후보가 복지주의를 들고 나왔다면 선거에서의 승리는 어려웠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국민소득 2만 불 달성, 동반성장 등 기존의 발전주의 패러다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민주정치에서 국민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는 한계 때문이었다. 2007년까지 국민여론은 복지주의에 대한 선호가 높지 않았다(박종민, 2008). 국가보안법 폐지를 포함한 4대개혁 입법도 좌파의 의제였지 개혁정치(깨끗한 새정치)의 의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해 좌절한 것이다.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은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면서 2002년 대선의 주요 쟁점이었던 탈지역주의와 정치적 개혁을 어느 정도 성취했다. 그러

나 2004년 총선 이후 열린우리당이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치적 진보'의 연대였던 2002년 선거연합이 정치개혁의 성공으로 인해 적실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강원택에 의하면 "2000년 갤럽인터내셔널의 밀레니엄 서베이에 참여해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한국 등을 대상으로 정치만족도를 조사한 바 있는데 한국의 정치만족도가 제일 낮았다. 반면, 참여정부 시절 자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정치만족도는 75%에 달했다."(오마이뉴스, 2006/12/14)고 한다. 반면 2009년 정치만족도는 '불만족' 응답이 83.2%(전혀 33.5% + 별로 49.7%)였고, '만족' 응답은 14.8%(매우 0.4% + 비교적 14.4%)에 불과했다(이영섭, 2009). 최근 정권교체를 바라는 상당수 유권자의 불만이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는 이러한 정치적 불만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쟁점은 사회적 필요에 의해 등장하지만 일단 문제가 해결되면 소멸한다. 열린우리당의 과반수 당선을 가져왔던 2004년 선거를 많은 이들은 정당재연합을 가져온 선거라고 해석했다. 기존의 지역정당으로부터 해체된 수도권 유권자를 기반으로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탄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운 정치'라는 쟁점은 선거쟁점에 불과했지, 서구에서의 노동과 자본의 균열처럼 정당의 연합을 지속시킬만한 정당재편성을 위한 균열쟁점이 아니었다.

집권 1년 만에 '새로운 정치'라는 쟁점이 해소되자, 참여정부는 '양극화'를 의제화하는 데 성공했다.[2] 발전주의에 대항하는 복지주의 쟁점은 서구에서의 노동과 자본의 균열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는 정당연합을 안정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참여정부가 이의 쟁점화에 성공한 것은 장기적으로 정당재연합을 이루기 위한 적절한 시도였지만, 단기적으로는 스스로를

2) 연합뉴스의 역대 대통령 연설 그래픽 서비스를 보면 참여정부가 1년 만에 주요 의제를 정치에서 경제로 옮겨갔음을 한 눈에 알 수 있다(연합뉴스, 2011/01/03). 경제쟁점이 2007년 대선에서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2004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말이다.

소수파로 전락시키는 모험이었다. 열린우리당이 당내 노선투쟁, 정체성 혼란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선거연합과 선거 후 집권의제가 변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내 구민주당 출신은 청와대보다도 경제적 쟁점에서 보수적이었다. 종부세 개정안이 국회에서 두 번이나 좌절된 것이 단적인 예이다. 반면 좌파진영은 노무현 정부가 좌파정부이기를 기대했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자 등을 돌림으로써 선거연합의 해체를 가속화시켰다.

반면 한나라당은 뉴라이트 운동을 통해 대중 속으로 파고들었다. 한반도선진화재단과 같은 지식인조직을 통해 성장주의/발전주의 이념을 확산시켰다. 성장과 분배의 문제, 한미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문제 등 경제적 쟁점을 둘러싸고 진보진영의 해체는 가속화되었지만, 한나라당은 오히려 재연합되었다. 1997년에는 외환위기가 김대중 후보의 당선에 결정적으로 기여했고, 2002년에는 정치적 개혁문제가 쟁점화되면서 한나라당은 소수당으로 전락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정치개혁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되었다. 정치개혁이 어느 정도 성공하면서 한나라당의 권위주의의 유산, 차떼기로 상징되는 부패 이미지도 사라지게 되었다. 여기에 박근혜 대표의 천막당사 이미지정치도 기여했다. 민주정부 10년의 성과로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깨끗한 정치가 가능해지면서, 정치적 쟁점은 사라지고 경제적 쟁점—발전주의 대 복지주의—이 전면에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경제적 쟁점이 부각되자, 국민 다수가 발전주의를 지지하고 있던 현실(박종민, 2008)에서 한나라당이 다수당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2007년 대선 직후 실시된 중앙일보의 조사 결과는 성장주의자들이 복지주의자를 능가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조사 결과 한나라당 지지자의 68.6%, 민주당 지지자의 54.9%가 성장주의를 지지했다(중앙일보, 2007). 다수의 유권자, 특히 복지의 수혜계층이라 할 수 있는 저소득층도 복지정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대선 전인 2007년 12월 동아시아연구원(EAI: East Asia Institute)과 한국리서치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복지정책 대 성장정책 선호도가 각각 51.9% 대 43.3%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대선

이후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오히려 성장우선이 더 증가한 것이다(신창운, 2009).

결론적으로 2002년의 선거연합이 해체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개혁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정치개혁이라는 선거의제가 적실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선거의제가 적실성을 상실함에 따라 노 대통령이 양극화를 의제화하면서 복지정책을 추진한 결과이다. 참여정부는 사회지출이 경제지출을 초과할 만큼 복지예산을 가파르게 올렸다. 참여정부의 집권의제가 정치에서 경제로 옮겨가면서 정치적 진보의 연대였던 선거연합의 해체가 가속화되어, 정치개혁세력과 경제적 좌파세력이 분열하게 된 것이다. 한국인의 의식에는 박정희의 발전주의 신화만 존재할 뿐,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복지주의는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미약했다.

노무현 정부는 양극화를 의제화하는 데 성공했지만, 선거연합의 해체를 가속화시켰을 뿐 이를 해결할 수단은 갖지 못했다. 양극화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를 해결할 수단에 대해 사회적 공론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선거를 통해 이러한 정책을 집행할 권한(mandate)을 위임받아야 한다(양재진, 2008). 단순히 빈부격차 해소가 공약집에 있다고 해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선거과정을 통해 쟁점으로 정치화되고,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이를 해결할 정책적 권한과 수단을 동시에 위임받아야 가능하다. 복지정책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입안된 결과, 일부 복지정책—근로장려소득, 기초노령연금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실시는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야 수혜자가 생겼다. 즉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은 저소득층을 동원하는 데는 부족했던 반면, 종부세, 재산세 등의 인상으로 중상위층을 이탈시켰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진보적이었지만 경제적으로 보수적이었던 다수의 중상위층이 이탈하고 소수의 서민층이 새로운 지지자로 유입되면서 노 대통령의 지지기반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이러한 노 대통령의 지지기반 변화는 한나라당의 정당재연합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오

늘날 한나라당에 대한 35%가 넘는 안정된 지지는 단순한 지역주의 지지가 아니라, 발전주의라는 경제적 쟁점에 의한 재연합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안정된 것이다.

반면 좌우 언론의 '참여정부 실패' 공격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낮은 지지도를 보이자, 2007년 대선에서 여당과 여당후보는 복지주의를 내걸고 정면 승부하기보다 노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선택했다. 가장 큰 실책은 여당이 열린우리당을 깨고 지역주의 정당으로 후퇴한 것이다. 여당은 선거 기간 동안 이명박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선거전을 펼침으로써 자신의 비전을 제대로 알리지도 못했고 선거쟁점은 실종되었다. 또한 "안아줍시다"라는 캠페인으로 상처받은 유권자를 위로함으로써,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의 실정을 인정하는 유세를 펼쳤다. 이처럼 열린우리당을 해체하고 쟁점 없는 대선을 치른 결과, 대통합민주신당은 정당해체를 경험했고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하게 되었다.

앞에서 논의한 정당재편성 이론으로 2007년 대선을 해석하면, 진보진영의 패배와 이명박 후보의 당선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인다. 노 대통령과 차별화를 통해 패배한 여당후보의 선거 결과에 노 대통령이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 모순이다. 오히려 이명박 후보는 노 대통령의 좋은 업적은 계승하겠다고 해 '노명박'이라는 신조어가 나오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낮은 지지도가 여당의 패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비논리적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 말 지지도는 20%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후보는 승리했다. 반면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말 지지도는 30~35% 내외였지만, 정동영 후보는 패배했다. 이러한 주장의 경험적 타당성은 다음 장에서 검증된다.

Ⅳ. 한국의 정당재편성 가설 검증

1. 자료와 가설

이 장에서 사용하는 경험적 자료는 선거연구회가 2007년 선거 직후 실시한 전국 직접설문조사 결과와 선거 전인 2007년 12월 초 R&R(리서치앤리서치)에서 실시한 전국 직접설문조사 결과이다. 각각의 표본은 1,200개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도 구간에서 ±2.9%이다. 또 하나의 자료는 2008년 8월 촛불집회 기간에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와 내일신문이 공동조사한 전국 전화설문조사 결과이다. 표본은 1,000개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도 구간에서 ±3.2%이다. 네 번째 자료는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이 2011년 5월 7~8일 전국 표본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여론조사한 결과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3.2%다.

이 장에서 검증될 가설은 Ⅲ장의 정당재편성 이론에 기초한 2007년 대선의 재해석으로부터 도출되었다. 이 글의 핵심 주장은 '정치개혁'이었던 선거쟁점이 집권의제인 '복지주의'로 변화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기반에 변화가 왔다는 것이다.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의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은 발전주의에 기초한 한나라당의 정당재연합이다. 이에 반해 열린우리당은 정치개혁을 어느 정도 완수함으로써 선거쟁점이 적실성을 상실했고, 이후 대선을 위해 급조된 대통합민주신당은 지역당으로 후퇴해 정당해체가 일어났다고 본다. 대통합민주신당이 지역당으로 후퇴한 것은 민주당과의 통합만이 이유는 아니다. 2007년 대선에서 여당이 뚜렷한 쟁점을 내세우지 못하면서, 투표 선택의 요인으로 '지역'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의 핵심 가설은 ① 노무현 대통령 임기 동안 노 대통령에 대한 지지기반에 변화가 왔다.[3] ② 이러한 변화는 한나라당이 (발전주의 이념으로)

재연합하는 데 기여했다. ③ 진보·보수 언론의 참여정부 실패론은 정동영 후보가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④ 대통합민주신당은 급조된 정당으로 노 대통령과 차별화했고, 상대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운동으로 뚜렷한 균열적 쟁점을 내세우지 못해 정당해체를 경험했다. ⑤ 결과적으로 현 진보진영의 위기는 정당해체 때문이지, 노무현 정부의 실정 때문이 아니다. 위 다섯 개의 가설 중 ③은 이미 많은 자료와 책에서 검증된 바 있다(조기숙, 2007; 김성재·김상철, 2010; 문재인, 2011).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나머지 네 개의 가설에 대해 경험적 분석을 실시했다.

2. 경험적 분석 결과

참여정부가 복지주의를 들고 나온 것은 장기적으로는 정당재편성을 위한 적절한 시도였지만, 단기적으로는 스스로를 소수파로 전락시킨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 2002년까지만 해도 유권자 대부분의 이념은 단봉형(이념분포의 정상곡선)이었다. 그러나 2004년 유권자의 이념분포는 양극화 현상을 보이는데(이현출, 2005), 그 변화의 내용은 블루칼라만 진보화되고 나머지 거의 모든 직업군에서 보수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2004년 총선의 승리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싼 이념논쟁이 촉발되고 의제가 정치에서 경제적 쟁점으로 빠르게 옮겨가면서, 정치적으로는 진보적(개혁적)이지만 경

3)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기반의 변화가 복지정책 때문인지 단순히 담론 때문인지는 현재 존재하는 자료로는 증명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필자가 청와대에 근무 중이던 2005년 9월 여론조사 결과에 기초해 유권자의 경제에 대한 욕구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한나라당의 발전주의에 대항해 복지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한 바 있으며, 정부는 2007년 초 '비전2030'을 내놓기에 이른다. 즉 복지주의 정책과 담론은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정책중심의 정치를 위해 연구준비된 것이었다. 참고로 미래발전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여정부의 정책 중 계승해야 할 것 두 가지를 묻는 질문에서 복지정책이 41.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지방균형발전정책이라고 36.8%의 응답자가 선택했다.

제적으로 보수적인(우파) 유권자들이 위협감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것이 유권자의 투표가 복지주의의 등장을 가져왔다기보다 복지주의의 등장이 유권자의 보수화를 가져왔다고 보는 이유이다.

실제로 2007년 대선 기간 이념적 요인이 후보자 선택에 매우 뚜렷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강원택, 2010). 특히 전통적으로 좌와 우를 가르는 '국가와 시장'에 대한 이념적 차원이 2002년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지만, 2007년에 처음으로 이념적 균열요소로 등장했다고 한다(Kang, 2008: 471-472; 강원택, 2010: 200). 복지주의와 발전주의는 국가와 시장에 대한 균열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 이념과 밀접한 관련을 보이던 대북쟁점은 여전히 이념적 균열요소로 발견되지만, 2007년 대선과정 중에는 선거의제로 관심받지 못했다. 2007년 대선의 또 한 가지 흥미로운 특징은 가구소득의 차이가 분배와 성장이라는 정책 항목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 것이다(강원택, 2010). 다시 말하자면 경제적 쟁점에 대해 계층적 지지의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2007년 12월 대선 직전 실시한 R&R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동안 지지기반에 변화가 관찰된다. 2002년에 노무현 후보에게 투표했는지의 여부, 2007년 노 대통령을 지지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유권자는 〈표 1〉과 같이 네 집단으로 분류된다. 이 분석은 표본의 수를 감소시켜 통계적 유의미성을 따질 수 없으나, 유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네 집단의 성격을 살펴보면 어떤 층에서 노 대통령 지지 철회가 일어났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이회창 후보를 지지했고, 대선 이후에도 여전히 노 대통령을 거부하는 다수의 유권자는 저소득층이거나 고소득층이고 영남 출신 유권자이다(〈표 1〉의 D). 원래 저소득층은 진보진영 지지자도, 양극화 때문에 노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것도 아니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회창 후보를 지지한 서민중산층에서 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소폭 상승(6.3%)한 것이 발견된다(〈표 1〉의 B).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무현 후보 지지층이었으나 후에 이를 철회

〈표 1〉 2002년 대선 투표와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지지 여부(N=847)

2007년 12월 노무현 대통령 평가	2002년 대선 투표	
	노무현 투표	이회창 투표
긍정	A 화이트칼라, 호남, 수도권 서민중산층 (가구소득 151~250만 원) (23.6%)	B 화이트칼라, 40대 서민중산층 (가구소득 151~250만 원) (6.3%)
부정	C 고학력, 호남, 블루칼라 중상위층 (가구소득 251~400만 원) (32.8%)	D 영남 저소득층(가구소득 150만 원 미만) 고소득층(가구소득 401만 원 이상) 고연령 (37.3%)

한 집단의 비율은 32.8%로 상당히 높다(〈표 1〉의 C). 이 때문에 노 대통령은 임기 내내 낮은 지지도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의 대표적인 집단은 고학력, 호남, 블루칼라, 중상위층으로 대변된다. 중상위층은 노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하였으나 경제문제가 쟁점화되면서 등을 돌리게 된 대표적인 집단으로 해석된다. 또한 탈지역주의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호남지역 유권자의 이탈과 민주노동당 지지자인 블루칼라의 이탈도 눈에 띈다. 2002년 노무현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던 고학력 유권자(Cho, 2003)의 이탈 또한 흥미로운 현상이다.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투표에 의미 있는 변수가 된 적은 거의 없다. 2002년 노무현 후보의 당선도 계층과는 무관했다(Cho, 2003). 〈표 2〉의 왼쪽 칸은 2002년 대선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로 분석한 노무현 투표에 영향을 미친 변수이며, 둘째 칸은 2007년 대선 직후 여론조사, 마지막 칸은 2008년 8월 여론조사 결과로 분석한 노무현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2002년과 2007년, 2008년의 자료를 비교해보면 지지기반에 뚜렷한 변화가 발견된다. 2002년 노무현 후보의 당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는 여야 성향을 제외하면 연령과 영호남 지역 변수, 그리고 대도시 변수였다. 젊은 층이 노무현 당선의 원동력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영남은 부정적, 호남은 긍

〈표 2〉 노무현 대통령 지지기반의 변화(2002년과 2007, 2008년의 비교)

2002년 노무현 투표 (로짓분석)		2007년 노무현 평가 (순서회귀분석)		2008년 노무현 평가 (순서회귀분석)
독립변수 (노무현 투표)	B(유의수준)	독립변수 (4단계 평가)	B (S.E.)	B (S.E.)
연령	-.022 (.001)***	연령	-.013 (.005)**	-.339 (.069)***
성별	-.138 (.292)	성별	-.023 (.122)	.000 (.169)
학력	.003 (.968)	학력	-.159 (.106)	-.280 (.102)**
가구소득	.012 (.714)	가구소득	.044 (.024)	-.119 (.048)*
대도시	-.359 (.009)**	화이트칼라	.336 (.165)*	.157 (.192)
농촌	-.111 (.630)	블루칼라	.350 (.270)	-.180 (.303)
여 성향	.455 (.007)**	주부	-.045 (.179)	-.131 (.214)
야 성향	-.775 (.001)***	학생	.427 (.202)*	-.050 (.289)
		수도권	-.106 (.161)	-.451 (.206)*
고향: 호남	2.294 (.001)***	고향: 호남	1.118 (.186)***	.943 (.190)***
고향: 영남	-.790 (.001)***	고향: 영남	.084 (.158)	.134 (.167)
N	1200	N	1149	872
-2LL	1431.303	Pseudo R^2	.074[b]	.098[b]
Percentage Correct	70.2%	MFI 유의확률	.000[c]	.000[c]

출처: 2002년 독립변수인 노무현 투표(양분변수): Cho(2003), 2007년과 2008년의 독립변수: 4점 척도의 노무현 평가.
주: a. * p<.05, ** p<.01, *** p<.001
b. Cox & Snell
c. 모형 적합도는 유의한 수준임.

정적인 지역주의 투표 또한 뚜렷이 존재한다. 다른 조건을 통제했을 때 대도시 유권자의 이탈은 수도이전 공약의 영향인 것으로 해석된다.

2007년과 2008년 자료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친 변수를 살펴보면, 2002년과 유사점과 차이점이 드러난다. 세대와 호남지역이 노무현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차이도 발견된다. 다른 모든 변수를 통제했을 때 2007년과 2008년 모두 영남의 지역주의가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더 흥미로운 점은 2008년 자료에서 가구소득이 노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반비례의 관계를 갖는다는

점이다.[4] 이는 계층정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서 노 대통령 생전인 2007년에 이미 영남 지역주의가 무너진 것으로 나타난다.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김두관 경남지사의 당선이 가능했던 여건은 이미 노 대통령 생전에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감정정치로 대변되는 지역정치를 무너뜨리고 계층에 기반을 둔 이익의 정치가 출현했다는 점에서 이는 한국 정치사에서 뜻깊은 발견이다.

보통 정당재연합은 젊은 유권자의 유입에 의해 가능하므로 정당재연합의 증거는 젊은 층 유권자에게서 찾을 수 있다. 부산과 광주지역 대학생을 비교한 한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의 정치의식은 광주에서 부산보다 높았지만, 정당지지는 부산에서 광주보다 높았다(전용주·김도경 외, 2008). 이는 광주지역에서는 정당해체가 일어났고, 부산지역에서는 정당재연합이 일어났음을 시사한다.

정당재연합의 증거는 투표율에서도 찾을 수 있다. 정당재연합이 일어난 정당의 지지자는 투표율이 높아지고, 정당해체가 일어나면 투표율이 하락한다. 각 정당지지자들의 투표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지역정당인 민주당의 투표율은 평균 투표율인 78.6%인데 비해, 정당연합이 일어난 한나라당은 88.7%, 창조한국당은 83.3%로 평균보다 높았다. 반면 대통합민주신당은 74.7%, 민주노동당은 68%로 평균보다 낮았다. 지지정당이 없다는 유권자는 65%로 가장 낮았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투표율의 관계는 정당지지도만큼 뚜렷한 지표가 되지는 못했다. 노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따른 투표율은 매우

4) 2008년 자료에서는 표본 누락이 128개에 달하는데, 그 중 111개가 소득에서 누락되었다. 누락자의 노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36.9 대 57.9로 부정적 지지가 높다. 그러나 다른 항목에 대한 답변으로 추론해보면 누락된 표본은 저소득층이라기보다는 고소득층에 가깝다. 가령 미국산 쇠고기를 먹겠느냐는 질문에 무응답자의 긍정적 응답은 41.2에 불과한 반면, 부정적 응답은 58.8로 나와 오히려 중상위층의 의견과 유사하다. 따라서 무응답자에 대한 분석은 이 논문의 주장을 강화할 뿐 약화시키지 않는다.

잘했다 78.3%, 대체로 잘했다 76.3%, 대체로 잘못했다 76.2%로 투표율과 큰 상관이 없었다. 다만 매우 잘못했다(N=356/1184)는 유권자의 투표율이 8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노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한나라당의 정당지지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이보다 결정적인 증거는 유권자의 정당지지도에서 찾을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대선 전(28%)과 후(27.4%)에 별 차이가 없다. 이에 비해 선거 전후의 한나라당(39.2%, 45.3%)과 대통합민주신당(6.8%, 13.7%)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지지도 차이를 보인다. 보통 선거 후에는 선거과정의 학습으로 인하여 지지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대통합민주신당은 민주당(9.4%, 1.2%)의 지지를 흡수한 것 외에 정당으로서 새로운 유인을 전혀 만들어내지 못했다. 올 한 해 정당지지도를 시계열로 살펴본 동아시아연구원(정한울, 2011)의 표를 보아도 한나라당의 지지는 35~40%를 상회하는 안정된 기조를 보이는 반면, 민주당은 20% 안팎에서 지지도가 형성돼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주당은 2010년 지방선거 승리 직후 처음으로 30%에 육박하는 지지를 얻었으나 다시 하락했다.

한나라당 재연합과 민주신당 해체의 주장을 보다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는 2007년 대선 직후 여론조사 결과의 분석에서 찾을 수 있다. 〈표 3〉은 정당지지 변수를 삽입한 〈모형 2〉와 정당지지 변수가 없는 〈모형 1〉을 분석한 결과이다. 〈모형 1〉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이명박 후보의 당선에 기여한 것으로 나온다. 강원택(2010)도 경제평가, 정책평가를 포함한 모형에서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모형 1〉이나 강원택의 분석모형은 제도화된 민주국가에서 투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정당지지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한국의 정당은 이름이 여러 번 바뀌고 이합집산했지만, 전통적인 여야의 명맥은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회창 대표 이후 당명을 꾸준히 이어오면서 국민 속에 하나의 제도화된 정당으로 자리 잡았다. 선진화 담론으로 무장된 한나라당은 후보 경선까지 제도화한 진일보된 정당으로 자리

〈표 3〉 2007년 이명박 후보 지지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독립변수	모형 1		모형 2	
	B (S.E.)	Exp(B)	B (S.E.)	Exp(B)
연령	.023(.006)***	1.024	.016(.007)*	1.016
여성	-.113(.145)	.893	-.154(.165)	.858
학력	.007(.124)	1.007	-.015(.141)	.985
소득	.001(.028)	1.001	.003(.032)	1.003
자영업	.103(.187)	1.109	.189(.214)	1.208
화이트칼라	-.226(.216)	.798	-.019(.246)	.981
주부	-.004(.223)	.996	-.011(.255)	.989
학생	-.633(.264)*	.531	-.424(.299)	.655
고향: 수도권	-.061(.183)	.941	-.015(.209)	.985
고향: 영남	.662(.181)***	1.939	.435(.206)*	1.545
고향: 호남	-1.213(.240)***	.297	-.433(.277)	.648
노무현 정부 평가	-.523(.086)***	.593	-.148(.101)	.863
한나라당 지지			2.023(.158)***	7.558
민주신당 지지			-1.615(.390)***	.199
상수	-.069(.520)	.934	-1.401(.607)*	.246
N	1149		1149	
Pseudo R^{2b}	.166		.331	

주: a. * p<.05, ** p<.01, *** p<.001.
b. Cox & Snell

매김했다.

따라서 정당에 대한 지지를 포함하지 않은 〈모형 1〉은 부적절한 모형 설정(model misspecification)의 문제를 갖는다. 미국선거 연구에서도 회고적 평가는 반드시 정당지지도를 통제한 가운데 검증된다. 정당지지가 포함된 〈모형 2〉에서는 노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이명박 후보의 당선과 거의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모형 1〉에 후보나 정책에 대한 평가까지 포함된다면, 노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이명박 후보의 당선과 전혀 무관하게 나타날 것이다. 〈모형 1〉보다는 〈모형 2〉의 설명력이 월등히 높은 것도 본 연구의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모형 2〉에서 이명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변수는 한나라당 지지, (대통합)민주신당 지지, 연령, 영남지역(출신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영남은 한나라당 지지와는 별도로 영향을 미쳤지만, 호남은 민주당 지지와 별도로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가 지역적 기반을 벗어난 반면, 민주당은 지역적 기반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한나라당은 지역을 뛰어넘어 정당재연합을 이룬 반면, 민주당은 지역당으로 후퇴한 결과 정당해체를 경험했다는 필자의 가설을 증명하는 것이다.[5)]

보다 직접적인 증거는 노무현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정동영 후보(각각 22%, 23%)보다는 이명박 후보(26%, 30%)에게 더 표를 던졌다—앞의 수치는 대선 전의 R&R 조사, 뒤의 수치는 내일신문 조사—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만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이명박 후보 당선의 결정적인 이유라면, 이명박 후보보다는 정동영 후보를 더 많이 선택해야 논리적으로 맞을 것이다.

참여정부가 집권 1년 만에 주요 쟁점을 정치개혁에서 경제 양극화로 이동시키면서, 열린우리당의 선거연합은 본격적으로 해체되었다. 참여정부의 탄생에 기여한 정치적 진보의 연대는 크게 세 집단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정치의 특징이 비동시성의 동시성(강정인·김수자 외, 2009)이듯 2002년 노무현 후보의 대선 승리는 전근대(지역주의 기반), 근대(좌파정당), 탈근대(노사모를 포함한 신주류) 세 집단의 정치적 진보연대로 이루어졌다. 정통야당(민주당), 좌파세력(민노당, 민노총, 전교조 등), 자발적 정치참여를 실천하는 자유주의적 진보세력인 시민계층, 즉 30, 40대 화이트 칼라로 대표되는 수도권 중산층이 그들이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자는 물론이고 중산층은 경제적 쟁점이나 국가보안법 폐지, 이라크 파병, 한미 FTA 등의 쟁점에

5) 한 토론자가 multi-collinearity의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 분석에 사용된 각 변수의 상관관계는 모두 .3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있어서 좌파와 공감대를 찾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참여정부 내 좌파의 이탈이 선거연합 해체에 기여하기도 했지만 결정적인 이탈은 중상위층에서 발생했다. 노 대통령을 지지했던 중상위층이 선거연합으로부터 이탈한 결정적인 이유는 국가보안법, 이라크파병, 한미 FTA 등의 쟁점 가운데 복지담론에 의한 경제적 쟁점인 것으로 해석된다.

중산층은 정치적으로는 개혁적이었지만 경제적으로는 단순하지 않았다. 이들은 기존의 시장경제질서에서 성공한 신주류로 상식과 원칙을 지지한다는 점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한 구주류와 대별된다. 그러나 시장과 개방에 대해 긍정적이고 자유에 방점을 둔다는 점에서, 시장보다 국가를 우선시하는 좌파와는 함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들 신주류는 노무현 정부의 탄생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탄생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홍영림, 2007).

그러나 노 대통령 서거 직후 가장 먼저 민주당 지지로 돌아선 집단은 수도권의 고학력 30, 40대 층이었다(윤호우, 2009). 서거 후 잠시 상승했던 민주당의 지지도도 이들에 의해 추동되었다. 수도권의 고학력 유권자들이 신문을 많이 읽는 집단임을 감안하면 복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학습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언론의 참여정부 실패 프레임, 좌파정권 프레임에 영향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고학력 유권자의 지지 변화와 언론의 영향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에서 다루어지므로 본 연구에서는 생략한다.

Ⅴ. 결론과 2012년 선거에 주는 시사점

정당재편성 이론으로 2007년 대선 결과를 재해석해보았다. 이제 한국 정당의 나이도 50년이 넘으면서 제도화되었고 유권자 속에 정당체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정당의 이름은 변했지만 보수정당과 민주정당에 새로운 내용

이 담기면서 그 뿌리는 유지되어온 것이다. 한국의 유권자도 단순히 현 정부에 대한 심판,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 정당의 역사와 총체적 기억 속에서 투표를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지지도를 통제하지 않은 분석에 기초해, 참여정부의 실패와 노무현 대통령의 낮은 지지도 때문에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유권자의 투표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과거에 대한 총체적 평가라고 할 수 있는 정당지지도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역대선거에서도 여야 성향을 통제하지 않은 분석은 무의미했다.

정당재편성 이론에 기초해 2007년 대선을 분석했을 때 이명박 후보의 당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발전주의에 기초한 한나라당의 정당재연합과 진보진영의 정당해체라고 생각된다.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한나라당의 총선 승리, 박근혜 의원의 독주가 이어지는 이유나 과반이 넘는 국민들이 한나라당이 정권을 재창출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6] 한나라당의 정당지지도는 이명박 대통령과 무관하게 안정돼 있다. 유일하게 한나라당의 지지도에 충격을 준 요인은 노 대통령 서거와 당내 내분뿐이었다(이철희, 2009).

지역정당, 좌파와 자유주의 세력이라는 세 집단의 분열이 구조적인 것이라면 진보진영의 연합은 불가능한 것일까. 2007년 대선에서 민노당 지지자들은 민주신당(11.8%)보다 한나라당(26.5%)에 더 많이 투표한 것으로 나온다. 진보진영에게 미래는 없는 것일까.

노무현 대통령 지지기반의 변화는 진보정당 재연합에 시동이 걸렸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영남의 지역주의가 깨지고 계층투표의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또한 진보정당 재연합에 호의적인 조건들도 다수 만들어졌다. 부시(George W. Bush) 정권 8년이 오바마(Barack Obama)의 등장을 가능하게

6) 동아일보가 2010년 12월 26일 코리아리서치센터(KRC: Korea Research Center)에 의뢰해 실시한 전화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 중 51.3%가 "한나라당이 재집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고 한다(김은미, 2011).

했던 것처럼, 이명박 정부의 등장에 기여했던 성장주의에 대한 기대가 좌절되고 복지주의 담론이 여론을 주도하면서 진보진영에게는 정당재편성의 거시적 조건이 마련되었다.

진보정당들은 현재의 한나라당이 다수당인 정당구도를 뒤집기 위해서 정당재편성을 유도해야 한다. 원래 정당재편성은 소수파가 끊임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해 불리한 정치판을 흔드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앞의 〈그림 1〉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정당재편성을 위해 필요한 조건—유권자의 정당해체, 균열쟁점—을 갖추고 있다. 단지 균열쟁점을 정치화할 정치인이 등장하지 않았을 뿐이다. 정당재편성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문제해결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제시되기 때문에 양당이 양극화 현상을 보인다.

진보진영의 정당재편성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 '복지주의'는 좌파와의 연대에 있어서 필수적인 쟁점이고, 최근 민주당의 획기적인 복지정책 제안은 이러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명박 정부의 실정으로 경남·부산, 불교, 여성 등 전통적 보수진영의 지지자들이 이탈하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20대의 정치화가 이루어졌다. 과거와 비교할 때 20대의 투표참여율 상승은 다른 세대를 3% 이상 앞질렀다(새사연 20대 프로젝트팀, 2010).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는 위협받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의 일방적 독주는 야당이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진보진영의 정당재연합을 위한 조건은 이미 마련되었다. 정치인들이 이를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유권자는 2007년, 2008년과 마찬가지로 일방적인 대안을 놓고 투표하게 될 것이고, 대선 투표율은 최저를 갱신하게 될 것이다. 2012년 선거의 승패와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는 전적으로 진보진영의 정당재연합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 투 고 일: 2011년 9월 2일
■ 심 사 일: 2011년 10월 5일
■ 게재확정일: 2011년 10월 11일

참고문헌

가상준·노규형. 2010, "지지율로 본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5년,"『한국정당학회보』, 9권 2호: 61-86.

강명세. 2004, "제17대 총선과 한국정당체제의 재편?" 한국정치학회 춘계학술대회 (서울, 3월 18-19일).

강원택. 2003, "한국 정치의 이념적 특성: 국회의원과 국민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중심으로,"『한국정당학회보』, 2권 1호: 5-30.

_____. 2010,『한국 선거정치의 변화와 지속: 이념, 이슈, 캠페인과 투표참여』(파주: 나남).

강정인·김수자·문지영·정승현·하상복. 2009,『한국 정치의 이념과 사상: 보수주의·자유주의·민족주의·급진주의』(서울: 후마니타스).

김성재·김상철. 2010,『야만의 언론, 노무현의 선택: 조폭언론과 맞선 노무현 5년의 투쟁기록』(서울: 책으로 보는 세상).

김은미. 2011, "국민 51.3% "한나라당 재집권할것"," 『뉴시스』(1월 3일), http://j.mp/dY0HV1 (2011/09/01).

노무현재단. 2010, "노무현 대통령 '지난 10년 가장 중요한 인물' 선정," http://www.knowhow.or.kr/bongha_inform/view.php?start=0&pri_no=999573792&mode=&search_target=&search_word= (2011/09/01).

문재인. 2011,『문재인의 운명』(서울: 가교출판).

박종민. 2008, "한국인의 정부역할에 대한 태도,"『한국정치학회보』, 42집 4호: 269-288.

새사연 20대 프로젝트팀. 2010, "정말 트위터가 20대를 투표소로 불러왔을까,"『오마이뉴스』(10월 9일), http://j.mp/brGP1D (2011/09/01).

손호철. 2007, "[손호철의 정치논평] 양극화 해소, 공약 아니었다?"『한국일보』(3월 11일), http://j.mp/fEZE2T (2011/09/01).

신창운. 2009, "MB 정부, 지지율보다 신뢰 회복이 더 급해,"『중앙일보』(2월 23일), http://j.mp/hdT7uU (2011/09/01).

신창운·고정애. 2010, "노무현 긍정 평가 늘어 … 현직 때와 '극과 극'," 『중앙일보』(12월 3일),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4747419 (2011/09/01).

안병만. 1977, "우리나라의 정당과 정치발전: 중대선거와 정당체제의 제도화과정,"『한국정치학회보』, 11권: 50-62.

양재진. 2008, "적극적 복지정책, 그러나 실패한 지지동원," 한반도 사회경제연구회 편, 『노무현시대의 좌절: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비판적 진단』 (파주: 창비): 107-122.

양정철. 2011, "'노무현 대 이명박' 경제성적표 실증적 대비교," 『양정철닷컴』 (2월 24일), http://j.mp/fV271y (2011/09/01).

오연호. 2007, "자기혁신 없는 집권세력에 대한 국민의 분노 심판은 처절했다, 밑바닥에서 다시 출발하자," 『오마이뉴스』 (12월 20일), http://j.mp/i0Awea (2011/09/01).

윤호우. 2009, "[특집]정당지지도 '30·40대의 대이동,'" 『위클리경향』, 830호 (6월 23일), http://j.mp/fADgZF (2011/09/01).

이영섭. 2009, "76% '올해 기억에 남는 정치사건, 盧 서거' [여론조사] 83% '정치에 불만족', 60% '삶의 질에 불만족'," 『뷰스앤뉴스』 (12월 31일), http://j.mp/hp9RPF (2011/09/01).

이철희. 2009, "무당파, 민주당으로 움직였다: '서거 정국'에서 30%대까지 지지율 급상승…수도권·노년층에서 '한나라당 이탈' 두드러져," 『시사저널』, 1025호 (6월 10일), http://j.mp/hlnGIy (2011/09/01).

이현우. 2006,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이슈와 후보자 전략," 어수영 편, 『한국의 선거 V: 제16대 대통령선거와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오름): 39-74.

_____. 2011, "제5회 지방선거의 주요 이슈와 유권자 평가," 『선거연구』, 2권 1호: 37-64.

이현출. 2005, "한국 국민의 이념성향: 특성과 변화," 『한국정치학회보』, 39집 2호: 321-343.

전용주·김도경·서영조. 2008, "부산·광주지역 대학생들의 정치성향 비교연구: 설문조사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2집 4호: 289-314.

정진민. 2003, "한국 사회의 이념성향과 정당체계의 재편성," 『한국정당학회보』, 2권 1호: 95-118.

정한울. 2011, "4.27 재보궐 선거와 향후 정국변화 전망," 『EAI 여론브리핑』, 97호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조국·오연호. 2010, 『진보집권플랜: 오연호가 묻고 조국이 답하다』 (서울: 오마이북).

조기숙. 1993, "합리적 유권자 모델과 한국의 선거분석: 여촌야도, 지역주의, 정당본위투표를 중심으로,"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 Ⅰ』 (서울: 나남) : 401-434.

_____. 1996, 『합리적 선택: 한국의 선거와 유권자』 (서울: 한울).

_____. 2000, 『지역주의 선거와 합리적 유권자』 (서울: 나남출판).
_____. 2002, 『16대 총선과 낙선운동: 언론보도와 논평을 중심으로』 (서울: 집문당).
_____. 2007, 『마법에 걸린 나라』 (서울: 지식공작소).
_____. 2009, "2008 촛불집회 참여자의 이념적 정향: 친북반미좌파 혹은 반신자유주의?" 『한국정치학회보』, 43집 3호: 125-148.
최장집·박상훈. 2008, "선거 결과, 반동이라고 여기면 안 된다," 『시사IN Live』, 16호 (1월 3일), http://j.mp/e6VlZp (2011/09/01).
최준영·조진만. 2005, "지역균열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경험적 고찰: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난 이념과 세대 균열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9집 3호: 375-394.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저, 예상한 외 역. 2008, 『미래를 말하다』 (서울: 현대경제사회연구원).
현재호. 2008, "한국사회의 이데올로기 갈등: 정치적 대표체제로서의 정당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2집 4호: 213-242.
홍영림. 2007, "세대·이념·지역구도 약화: [대선 D-6] 5년 전과 달라진 점," 『조선일보』 (12월 13일), http://j.mp/hnv3Uf (2011/09/01).

『연합뉴스』, "대통령 신년연설·신년사 키워드 그래프," (2011년 1월 3일) http://j.mp/hnQnSP (2011/09/01).
『오마이뉴스』 (2006년 12월 14일).

Beck, Paul Allen. 1979, "The Electoral Cycle and Patterns of American Politic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9, No. 2: 129-156.
Burnham, Walter Dean. 1974, "The United States: The Politics of Heterogeneity," Richard Rose (ed.), *Electoral Behaviour: A Comparative Handbook* (New York: Free Press): 653-726.
Burns, James MacGregor. 2003, *Transforming Leadership* (New York: GrovePress).
Campbell, James E. 1985, "Sources of the New Deal Realignment: The Contributions of Conversion and Mobilization to Partisan Changes," *Western Political Quarterly*, Vol. 38, No. 3: 357-376.
Carmines, Edward G. 1991, "The Logic of Party Alignments," *Journal of Theoretical Politics*, Vol. 3, No. 1: 65-80.
Carmines, Edward G. and James A. Stimson. 1989, *Issue Evolution: Race and the*

Transformation of American Polit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Cho, Kisuk. 1998, "Regionalism in Korean Elections and Democratization: An Empirical Analysis," *Asian Perspective*, Vol. 22, No. 1: 135-156.

_____. 2003, "Continuity and Change in the 2002 Presidential Election," *Korea Journal*, Vol. 43, No. 2: 109-128.

Clubb, Jerome M., William H. Flanigan, and Nancy H. Zingale. 1980, *Partisan Realignment: Voters, Parties and Government in American History*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Erikson, Robert S. and Kent L. Tedin. 1981, "The 1928-1936 Partisan Realignment: The Case for the Conversion Hypothesi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5, No. 4: 951-962.

_____. 1986, "Voter Conversion and the New Deal Realignment: A Response to Campbell," *Western Political Quarterly*, Vol. 39, No. 4: 729-732.

Kang, Won-Taek. 2008, "How Ideology Divides Generations: The 2002 and 2004 South Korean Elections," *Canad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1, No. 2: 461-480.

Key, V. O., Jr. 1955, "A Theory of Critical Elections," *Journal of Politcs*, Vol. 17, No. 1: 3-18.

_____. 1959, "Secular Realignment and the Party System," *The Journal of Politics*, Vol. 21, No. 2: 198-210.

Lipset, Seymour M. and Stein Rokkan. 1967, "Cleavage Structures, Party Systems, and Voter Alignments: An Introduction," Seymour M. Lipset and Stein Rokkan (eds.), *Party Systems and Voter Alignments: Cross-National Perspectives* (New York: Free Press): 1-64.

Oh, Chang Hun and Celeste Arrington. 2007, "Democratization and Changing Anti-American Sentiments in South Korea," *Asian Survey*, Vol. 47, No. 2: 327-350.

Sundquist, James L. 1983, *Dynamics of the Party System: Alignment and Realignment of Political Parties in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Abstract

An Analysis of 2007 Presidential Election from a Party Realignment Theoretical Perspective

Kisuk Cho

Commentators and scholars, both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claim that the governing party candidate lost the 2007 presidential election due to the economic policy failure of Roh Moo-hyun Administration. However, they both stood on opposing sides: conservatives concentrated on the low growth rate as a direct cause of economic failure as for the progressives, they focused on the polarization of wealth distribution. Surprisingly, president Roh's popularity soared after his retirement and he is now evaluated as one of the most respected presidents.

This study attempts to offer a systematic explanation for seemingly contradictory public opinion and thus demonstrates that accurate forecasts and predictions of election outcomes are possible through the analysis of the 2007 presidential election, from a party realignment theoretical perspective. The commentators' prevailing argument was not empirically substantiated. Instead, Roh's welfare policy is claimed to have contributed to the dealignment of the election coalition based on political reform and the party dealignment of the ruling party. This resulted in a shift in Roh's support base from region to class. Consequently, the Grand National Party took advantage of realignment, based on growth ideology as an anti-thesis of welfare ideology. The party alignment of the opposition party and concurrent dealignment of the ruling party are found to be the major determinant of the 2007 presidential election results.

Key words: Party Realignment, 2007 Presidential Election, Party Dealignment, Welfare Ideology, Growth Ideology